

##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 고찰

이진복\*

이 글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적 배제는 상대성, 다차원성, 과정, 악순환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회의 주류로부터 기회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는 생산성 향상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고도 위험 경제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배제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생산과정에서 체계적, 기능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는 거시적으로 지식기반경제의 객관적 경향과 미시적으로 행위자의 능동성을 매개하는 제도적 경로의존을 통해 에스핑-안데르센이 말하는 세 가지 복지체제로 분화된다. 사회적 포용의 메카니즘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상층과 하층이 더 이상 제로섬 게임 모델이 아니라는 사실과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창조성과 능동적 신뢰라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그러므로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상층과 하층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상층 배제와 하층 배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윈윈 정치로서의 일국민 정치인 제3의 길의 포용의 정치가 가능하다.

주제어: 사회적 배제, 지식기반경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복지체제

\*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 1. 서론

‘전후 복지국가 합의’는 첫째, 저숙련 남성 노동력에 기초한 자원(근력)기반경제의 최고 발전 형식으로서의 테일러-포디즘, 둘째, 평생직장에 기초한 남성은 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표준적 가족 형식, 마지막으로 예측가능한 표준적, 단선적 생애사와 충분한 출산율에 기초한 세대간 합의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와 함께 유연화와 구조적 장기실업이 일상화되었고 편부모 가구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규범화, 동거와 별거가 조건적인 새로운 가구형식들이 대세가 되었으며 불안정하고 복잡한 개인의 생애사와 출산율 저하, 인구의 노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압력은 그동안 해결되었거나 해결할 것으로 여겼던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새로이 제기했다. 특히 청년 실업자, 편부모, 장애인, 은퇴자, 이주민에게 잊혀졌던 빈곤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행 중인 근본적 사회변동은 전후 복지국가 합의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니, 복지국가 자체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문제로까지 인식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신빈곤(new poverty) 논의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에서는 ‘언더클래스(underclass)’, 프랑스에서는 ‘이중 속도 사회(two-speed society)’, 독일에서는 ‘2/3사회(two-thirds society)’, 덴마크에서는 ‘A팀과 B팀(A-team and B-team)’에 대한 논의가 유행하였다(Esping-Andersen 1999: 10).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적어도 유럽에서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사회정책의 지배적 논의가 되었다.<sup>1)</sup>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정책 논쟁이 사회적 배제로 대체되었고 복지국가의 단순한 해체와 고수가 아닌 재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논의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시기가 제3의 길의 신중도좌파가 각국에서 집권했던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든스(Giddens)에 의하면 제3의 길의 새로운 정치는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제는 불평등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주류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메카니즘이다. 포용과 배제가 중요한 개념이 된 것은 산업사회의 계급구조의 변동 때문이라 한다(Giddens 1998: 102-104). 이 변동과 관련하여 지식기반 경제는 특히 중요하다. 그는 지식기반경제를 세계화와 함께 우리 시대의 쌍둥이 혁명(twin revolution)이라 부르고 있다(Giddens 2000).

제3의 길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2000년, 리스본 유럽연합 이사회는 가장 경쟁력이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가 되는 것을 유럽연합의 다음 10년간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 전략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으로 유럽의 사회 모델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European Council 2000). 즉, 사회적 배제와 지식기반경제는 내재적으

---

1)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기원했다. 그러나 그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이었다. 1988년,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차 유럽연합 빈곤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그 개념을 언급했다. 1년 후, 유럽 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의 전문에 그 개념이 삽입되었다. 몇 달 후, 유럽연합 각료회의(European Council of Minister)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다차원적 조치에 초점을 맞춰, 1989년에서 94년까지 27개의 모델과 12개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3차 빈곤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또한 반 사회적 배제 정책에 대한 유럽연합 관찰(European Observatory on Policies to Combat Social Exclusion)을 창설하여 사회적 배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지표를 개발했다. 1992년, 유럽연합 사회정책 의정서로,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해 사회적 배제에 대한 투쟁을 유럽연합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정하면서 유럽연합 조약에 삽입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도 사회적 배제는 사회정책에 중심적인데, 가령, 영국의 블레이어 정부는 1997년, 정부부처 합동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태스크포스팀(Social Exclusion Unit)을 만들었고 프랑스에서는 1998년, 총리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사회적 배제 개념은 국제노동기구와 유엔개발계획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토론되고 있다(Mayers, B & Salais 2001: 28-30).

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와 관련하여 현상을 기술하는데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핵심인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로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메카니즘이란 지식기반경제의 거시적 경향과 행위자의 미시적 생애사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제도의 총체이다. 더구나 사회적 배제와 함께 사회적 포용의 메카니즘을 균형있게 논구하는 경우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배제 개념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김영란 2001; 박병현·최선미 2001; 심창학 2001).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포용과 지식기반경제의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본래의 정의에 맞게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포용의 메카니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분하면 첫째, 지식기반경제에서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사회적 배제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할 때, 사회적 배제/포용 개념의 독자적 설명력은 지식기반경제의 어떤 특유한 현상을 반영하는가? 둘째, 사회적 배제의 미시적 기초와 제도적 유형은 무엇이며 사회적 포용의 제도적 접근은 어떠해야 하는가? 셋째, 사회적 배제는 정치 노선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가?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사회적 배제와 지식기반경제의 개념 정의이다. 3장은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의 경향 그리고 그 개인화와 제도화에 의한 유형을, 4장은 사회적 포용이 가능한 객관적 토대를 다루는데 각장에서 정치 노선과 관련된 함의를 해명한다. 마지막 장은 사회적 포용의 제도화로 그 결론을 대신하고 있다.

## 2. 예비적 개념 정의

###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은 현실 설명력을 높이는 개념의 복잡성을 말하는 것으로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제는 장소와 시간에 상대적이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능동성과 국가의 제도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사회적 배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 지방, 공동체, 가족, 개인까지의 다층적 현상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적 배제는 역동적 과정이다. 상호강화하는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의 선순환과 악순환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사회적 배제는 기회의 구조적 결여로서 뒷에 빠지는 것(entrapment)을 함의한다(Mayers, B & Salais 2001: 34-37; Barnes, et al. 2002). 영구적으로 배제된 자들은 시민사회 안에 있지도 않은, 즉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기능이란 측면에서 무의미한 범주로서의 언더클래스를 구성한다. 물론 사회적 포용의 메카니즘도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이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단절되어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주류 기회들로부터 개인들과 집단들을 고립시키는 박탈의 다차원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과정들의 조합(또는 혼합)’으로 정의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배제 개념의 진정한 발견적 가치는 사람들이 박탈되고 때때로 상호 강화할 수 있는 관계들과 과정들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Mayers, B & Salais 2001: 37).

이어서 일차원성과 다차원성의 측과 정태적 결과와 동태적 과정의 측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여타 개념들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분석 틀

|     | 정태적 결과          | 동태적 과정             |
|-----|-----------------|--------------------|
| 소득  | 빈곤(poverty)     | 궁핍(impoverishment) |
| 다차원 | 박탈(deprivation) | 사회적 배제             |

출처: Mayers, B & Salais 2001: 37.

여기서 빈곤은 상대적 소득 빈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 또는 가구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 기준의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보통 각국의 평균 가처분 소득의 반 또는 60% 이하로 조작화된다.

궁핍은 사람 또는 가구가 소득 빈곤선 이하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매우 오랫동안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1990년대에 사회, 경제적 가구 패널 자료, 국가간 패널 자료를 통해 조작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박탈은 재화들과 서비스들을 결여한 다차원적 상황으로 사람과 가구의 실제 생활 조건을 지칭한다.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식주 관련 항목으로 조작화된다.

사회적 배제는 상호 강화할 수 있는 배제의 역동적, 다차원적 과정들을 지칭한다(위의 책: 37-42).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 들로는 빈곤과 저소득, 노동 시장에서의 접근 결여, 사회적 지원과 네트워크의 희소한 또는 비존재, 지방 또는 근린 지역의 효과,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들고 있고 그 관계와 시간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Pierson 2002: 8-9).

여기에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의 구분을 첨가하면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는 안과 밖의 수평적 축이고 불평등은 위와 아래의 수직적 축과 연관된다. 즉, 사회적 배제는 차별을 통한 시민권의 부정 또는 비실현을 의미하는 공동체의 상을 갖고 있는 반면 불평등은 지배 또는 착취에 의한 계급 또는 계층 모델을 상징한다. 기든스가 지금이 민주주의, 인권, 시민권과 같은 보편가치들이 실제적 강세를 지닌 인류역사상 최초의 시대라고 진단하고(Giddens 1997: 280) 벡(Beck)이 재귀적 근대화의 갈등선을 안/밖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Beck 1998) 사회적 배제 논의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안과 밖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고 선순환과 악순환이 모두 가능한 거대한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기든스는 하층 배제와 다른, 자발적 또는 자기 배제(voluntary or self-exclusion)로서의 상층(upperclass) 배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배제를 구분한다(Giddens 1998). 기든스가 이처럼 상층 배제를 하층 배제와 구분한 이유는 상층이 다수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호화성채에 갇혀있다는 의미에서, 즉 그들도 자발적이긴 하지만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 비시민(non-citizen)이라는 의미에서 배제이고 상호책임의 사회 계약을 하층에게만 전가하는 신우파와 달리 상층에게도 ‘책임없이 권리없다.’는 제3의 길의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 2) 지식기반경제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지식기반경제란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이용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둔 경제로서 경제성장에서 지식과 정보의 더 완전한 인정’을 뜻한다(OECD 1996). 그런데 지식기반경제의 대쌍개념인 자원(근력)기반경제가 주로 제조업을 지칭하고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도 이미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의 더 완전한 인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결정적 차이는 카스텔(Castells)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마인드가 생산체계의 결정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 생산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현실(Castells 1996: 32), 즉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자원(근력)기반경제와 달리 지식과 노동력이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다(김호균 2001).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가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자본에 체화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력에 체화된다. 따라서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 중요한 자본은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이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의 구성요소가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변동 속에서 어떠한 위상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의 구성요소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OECD 1996; Neef, et al. 1998: 115-119; 김호균 2001).

- ① 사실적 지식(know-what): 사실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보통 정보라 불려진다.
- ② 원리적 지식(know-why): 원리의 과학적 지식 또는 자연법칙을 의미한다.
- ③ 방법적 지식(know-how):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숙련을 의미한다.
- ④ 사회적 지식(know-who or where): 사회관계의 형성을 의미한다.

사실적 지식과 원리적 지식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정보기술에 의하여 물적 자본에 코드화될 수 있는 지식(codified knowledge)으로 대상화된 지식이지만 방법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은 정보기술로도 코드화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기 때문에 사실적 지식과 원리적 지식을 다루고 동원하고 개발하는 인간 또는 그 관계에 체화되는 주체적 측면의 지식으로 각각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이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이란 방법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 지식과 원리적 지식을 코드화한 물적 자본보다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즉 창의성과 능동적 신뢰가 지식기반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암묵적 지식은 지식기반경제에서 부 자체가 무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의식주에 있어서 '무엇'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지면서 가치의 취향화, 미학화가 관철되고 있고 이미 주도하고 있다(Drucker, et al. 1999; 황태연 1999). 가령 맑스가 자신의 노동가치론을 전개할 때, 아마포라는 유형적 부의 길이로 가치척도를 형상화했다면 오늘날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동일한 유형적 부일지라도 상표, 디자인, 창조적 아이디어 등의 무형적 부가 더 중요해졌다. 나아가 유행에 따른 가령, 멀쩡한 청바지보다 일부러 찢어진 청바지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은 부 자체가 무형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혼한 사례이다.

이는 다시 서비스, 문화산업, 즉 비물질적 생산영역의 혁명적인 확장을 반영한다. 이 영역이 자본의 엘도라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변의 대중문화 또는 소비문화를 통해 즉각 체험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물질적 생산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물질적 생산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20 : 80이 되었다(Atkinson & Court 1998). 육체노동자, 즉 노동자계급은 사멸했다. 이처럼 물질적 생산영역이 이미 주도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기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업인구가 오늘날 거의 소멸한 것처럼 미래에 물질적 생산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

상도 전혀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경향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아니 불확실성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파괴되고 가장 확실한 것이 불확실성이 되었다. 불확실성은 노동자, 기업 심지어 어떤 지역 전체의 경제적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또한 그것은 경제적 혁신과 성장의 주요 추동력이다. 즉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진 위험(danger)이 아니라 혁신과 새로운 안전을 창출하는 위험(risk)이고 그것도 단순히 외부에서 부과되는 예측가능한 외적 위험이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제조된 위험이다. 기든스의 어투를 빌린다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성은 불확실성과 기묘한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 3. 사회적 배제의 메카니즘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배제는 정보화에 대한 접근수단과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격차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표현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생산과정에서 체계적, 기능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장기 실업자가 되며 취업을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의 일자리만을 얻을 뿐이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신뢰 네트워크가 없다. 따라서 배제된 자들은 객관적, 주관적으로 미래의 생활향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빈곤상황에 처해진다. 이러한 전망의 결여는 빈

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에서 보듯이 문화적 배제를 가져오고 이는 정치적 배제로 연결되며 이러한 배제적 효과의 축적은 공간적 배제에서 명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배제는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인데, 그것은 배제된 자들이 현대의 아무도 가지 않는 게토지역(ghettos, no-go areas)의 벽 뒤에 윤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누적은 한 집단의 식별가능한 특징(인종, 언어, 종교, 고향, 사회적 출신, 혈통, 거주지 등)에 부착되어 낙인화되는 경우 배제의 효과가 최대화된다(Littlewood, et al. 1999).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에서 실로 새로운 측면은 배제의 원인이 자본가의 착취 때문이 아니라 착취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착취로부터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 기업가에게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미숙련 육체노동자는 더 이상 착취의 유효한 재료가 아니다. 즉 배제된 자들은 착취받을 자격조차도 상실한 것이다.<sup>2)</sup> 이런 측면에서 이들은 맑스의 범주를 빌린다면 산업예비군도 아니고 롬펜 프롤레타리아트와 유사하다(Heisler 1994). 최하층(the very bottom)은 더 이상 사회의 밑(bottom)이 아니라 외부(outside)이다(Beck & Beck-Gernsheim 2002: 50). 따라서 자원(근력)기반경제의 계급 적대의 제로섬 게임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식기반경제에서 미숙련 육체노동자는 원리적으로 생산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없기 때문

2) 빈곤하지만 착취받지 않는 배제된 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기계와 같은 물적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만 구식이어서 도덕적으로 마모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의 상황과 유사하다. 도덕적으로 마모된 물적 자본은 그것이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았을지라도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아서 폐기되기 때문에 자본이기를 그치고 이를 새로운 물적 자본으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자본가도 자본가이기를 그친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미숙련 육체노동자의 노동력은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기를 그치고 사회적 자본을 동원하여 인적 자본을 갱신, 축적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으로 노동자이기를 그칠 것이다(Littlewood, et al 1999: 105-106).

에 경제성장과 사회적 배제가 동시에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쓸모없는 잉여로서의 사회적 배제가 악순환으로 강화되는 원인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행위를 결정짓는 기본 메카니즘의 성격이 수확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 to Scale)에서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to Scale)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요소의 투입이 한 단위 추가됨에 따라 어느 정도로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결국 어느 선에 이르면 생산량이 점차 정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확체증의 법칙<sup>3)</sup>은 반대로 생산요소의 투입이 한 단위 추가될 때마다 생산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수확체증의 법칙은 반대로 생산량 증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점차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대체로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하지만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확체감의 법칙은 시장의 어떤 영역에서 앞서가는 개인이나 기업도 결국에 가서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확체증의 법칙은 시장의 어떤 영역에서 일단 앞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앞서 나가지만 한번 뒤쳐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3) 지식기반경제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정보재화의 비경합적 성격(non-rivalry)으로부터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효과는 멧칼피의 법칙(Metcalfe's Law)으로 표현되는데 이 법칙에 의하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한다. 둘째, 비경합적 성격과 근원적으로 같은 이야기지만 지식정보재화 자체의 한계생산비용(marginal cost)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이는 첫 단위를 생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재생산하기는 매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효과를 들 수 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해서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그 상품의 미래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그만큼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양신규·류동민 2000; Drucker, et al 1999: 161-169).

뒤쳐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확체증의 법칙은 어떤 영역의 시장에서 우연히 또는 현명한 전략에 의해 성공한 개인이나 기업이 더욱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실패한 개인과 기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선순환적 메카니즘(positive feedback mechanism)이라고 할 수 있다(양신규·류동민 2000; Drucker, et al. 1999). 물론 패자에게는 악순환이지만. 따라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동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어떤 영역에서의 경쟁자간의 균형보다는 그 영역에 대한 승자독식현상이 심화되고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시장예측이 어려워지는 불확실성이 강화된다. 결국 이러한 승자독식현상 때문에 누가 수확체증의 네트워크에 포함되고 누가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는가가 사활적 이해가 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배제는 신우파가 사회복지국가를 용인했던 가부장적인 일국민 정치(one nation politics)로부터 상층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열망하는 숙련노동자들과 여피화된 화이트칼라의 정서를 대변하고 무능력한 좌파정당 집권시의 불안을 부추기는 공포의 전략을 사용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선명히 나누는 이국민 정치(two nation politics)로 자신을 근본적으로 일신해서 한 시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객관적 토대이다.<sup>4)</sup> 이국민 정치는 신우파 정당을 비

4) 제습(Jessop)은 대처주의를 이국민 정치의 전형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국민 정치를 정의한다(Jessop, et al. 1988). 첫째, 이국민 정치의 개념적 정의로서 이국민 정치는 생산자와 기생층이 대립하는 사회의 위로부터 아래로 확장되는 단일한, 수직적 균열에 기초한 사회분리의 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이국민 간의 대립은 내재적으로 적대적이고 케인즈주의적 전후 합의의 집단주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 여기서 생산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없는, 시장에서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로 구성되고 기생층은 배제된 자들로 구성된다. 물론 생산자/기생층의 대립뿐만 아니라 다른 이분법, 가령 개인적 자유/국가적 강압, 동/서, 부자/빈민의 이분법도 동원한다. 둘째, 지원(support)의 정치에서 보면 이국민 정치는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그들의 기여 때문에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하고 기생층은 시장에 적당한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작은 국가'로,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셋째, 권력의 정치에서 보면 이국민 정치는 재상품화와 생산

록 냉혹하지만 능력있는 정당으로 인식시켰고 능력제일주의(meritocracy)라는 이데올로기로 상향이동하려는 자에게 자기위안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우파가 배제의 원인을 좌파의 일탈적 행태에 대한 관용과 과도한 복지비용의 지출로 본 점에는 일정정도의 사실이 담겨 있지만 이로부터 언더클래스의 빈곤의 문화를 배제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상정하고 복지제도 자체를 해체하려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킨 것이다. 즉 신우파의 이국민 정치의 근저에는 피해자 탓하기가 들어있다. 더구나 신우파에게 언더클래스의 존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것으로 이는 마치 뒤르켐의 범죄에 대한 분석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준다. 범죄인의 일탈과 그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규범과 응집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언더클래스는 다수에게 개인적 효율성과 성공, 도덕적 건전성을 증명하고 그러는 한, 사회의 현상태(status quo)를 위해 기능적이라는 것이다(Littlewood, et al. 1999).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는 행위자의 능동성에 의존하여 국가의 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개인화와 제도화의 제한을 받는다.

### 1) 사회적 배제의 개인화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행위자가 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인 자기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생활형식의 다원화’로 나타난다.

---

에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맥락에서 경제적, 정치적 위기관리를 위해 더 큰 국가개입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저항에 대한 억압과 공권력의 투입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는 ‘강한 국가’로, 신보수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이국민 정치는 미국에서 흑/백 이분법의 쪼개기 정치(wedge politics)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남부의 백인 민주당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생산자/기생층의 대립구도로 백인과 흑인을 대립시키는 남부 전략(southern strategy)을 추진했고 실제로 남부 백인 민주당원을 ‘레이건 민주당원’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여 오늘날 남부가 공화당의 아성이 될 수 있었다(Greenberg, et al. 1997).

백은 증가하는 실업과 빈곤의 조건들 하에서 개인화는 빈곤과 실업이 장기간동안 한 집단에 점점 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의 특정단계들에서 사회를 가로질러 분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역동적인 실업과 빈곤이 나타나고 불안전이 사회 안의 거의 모든 장소에 퍼진다. 그리고 계토의 빈곤의 문화가 명시적으로 보여주듯, 가장 명시적인 사회적 배제조차도 사회적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로 치환된다(Beck & Beck-Gernsheim 2002: 41).

이러한 개인화 논의를 라이저링(Leisering)과 라이프프리트(Leibfried)는 역동적 또는 생애주기 접근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제도에 의존하는지의 여부와 그 제도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능동성 여부로 빈곤 경력(poverty careers)을 유형화한다.

위급한 생애주기는 빈곤 때문에 사회부조를 받는 시기이고 정상적 생애주기는 더 이상 빈곤하지 않아서 사회부조를 받지 않는 시기를 말한다. 수동적 지속과 능동적 대응은 빈곤하여 사회부조를 받는 자의 생애사적 전략에 따른 능동성 여부의 구분이다.

<표 2> 빈곤 경력의 유형

|                                       | 수동적 지속<br>(passive endurance)                              | 능동적 대응<br>(active coping)  |
|---------------------------------------|--|--|
| 위급한 생애주기<br>(critical life courses)   | 고착된 빈곤 경력 - 배제<br>(entrenched poverty career - exclusion)) | 복지국가 내의 정상적 빈곤 경력 - 2차 포용(welfare-state normalised poverty career - secondary inclusion) |
| 정상적 생애주기<br>(normalised life courses) |  | 최적화된 빈곤 경영 - 포용<br>(optimised poverty management - inclusion)                            |

이러한 제도와 행위자 행태의 결합 결과로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 가지 빈곤 경력이 도출되는데 고착된 빈곤 경력은 자율적 행위 능력의 결여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회부조에 의존하는 경우로, 빈곤의

문화에 의해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걸려 있다. 이 하향 이동의 빈곤 경력이 바로 사회적 배제를 말하는 것이다. 최적화된 빈곤 경영은 행위자의 능동적 대응으로 상향 이동하여 더 이상 사회부조를 받지 않는 경우로, 사회적 포용과 같은 의미이다. 복지국가 내의 정상적 빈곤 경력은 장기적인 사회부조에도 불구하고 능동성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직접적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자들로 복지국가의 도움 안에서 정상적인 상황이고 이런 의미에서 2차적 포용이다. 물론 계속되는 실패로 다시 배제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Leisering & Leibfried 1999: 131-140).

이러한 유형구분은 행위자들이 빈곤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능동성에 따라 빈곤에 빠지는 경우만큼 빈곤에서 탈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통념과 달리 빈곤은 종종 잠정적인 생애주기의 에피소드일 뿐이고 능동적으로 극복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일시적 경험과 잠재적 위험으로서의 빈곤의 경험은 종래의 생각과 달리 어떤 주변집단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급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즉, 빈곤은 시간과 연관되어 일시화(temporalisation)되고 사회적 경계를 넘어 초월화(transcendence)된다는 의미에서 개인화된다. 이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빈곤의 부정이 아니라 빈곤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고 빈곤의 가능성이 편재적이기 때문에 더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다(위의 책: 9-10).

더욱이 위의 표의 공란이 보여주듯이 수동적인 경우에 빈곤에서 탈출하는 경험적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능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빈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능동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 능동성 여부에 따라 포용과 배제를 구

분하고 있는, 즉 빈곤은 포용과 배제가 모두 가능한 교차로라는 빈곤의 개인화 논의는 왜 빈곤에서 사회적 배제로 개념을 전환해야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배제와 포용이 개인의 능동성에 달려있고 2차적 포용이 배제가 될 수 있는 예비적 배제로서의 유동적인 회색지대란 사실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인화’라고 달리 불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제 개념을 비판하고 불안전을 강조하려는 그들의 애초 의도와 반대로 그들의 논의 자체가 사회적 배제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것으로 사회적 배제 논의를 보강하는 것이다.

생애사적 전략에 따른 능동성을 ‘자율적 행위능력’, ‘사회적 능력’, ‘목적 행위’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의미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더 넓은 맥락에서 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지식기반경제의 맥락에서 설명하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능동성을 전제한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은 개인에게 체화된 창조적 인식 능력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적 개념이지만 개인에게는 의사소통능력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소유’ 자체가 항상 위험으로 경험된다.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의 항구화 때문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도덕적 마모 속도가 너무 빠르고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기반경제 자체가 양가적인 고도 위험 경제(high risk economy)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개인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유연화, 또는 비정규직 영역의 차상위 계층에서 배제와 포용이 모두 가능한 거대한 회색지대를 볼 수 있다.

행위자의 능동성이 빈곤을 다원화시켰다면 사회적 배제는 제도에 따라 다원화된다. 사회적 배제는 거시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객관적 경향과 미시적인 행위자의 능동성을 매개하는 제도적 경로의존

(institutionally path-dependent)을 통해 그 결과가 분화된다는 것이다.

## 2) 사회적 배제의 제도화

기존의 많이 통용되는 사회적 배제의 유형 분류는 객관적인 제도 분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춘 논의 분석인 것 같다.<sup>5)</sup> 실버(Silver)의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이 대표적이다(Silver 1994).

연대(solidarity) 패러다임은 프랑스 공화주의에서 기원한 것으로 배제를 개인과 사회간의 사회적 연대가 해체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국가적 합의, 집합의식, 일반의지가 개인을 매개 제도를 통해 사회에 연계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접근은 집단간의 문화적 또는 도덕적 경계가 사회 질서의 이원론적 범주를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일탈이나 아노미처럼 배제는 사회적 응집성을 위협하고 강화한다. 따라서 배제의 반대는 통합이고 그 과정은 삽입(insertion)이다.

전문화(specialization) 패러다임은 영미 자유주의에서 기원한 것으로 배제를 전문화, 사회분화, 분업, 영역 분리의 결과로 간주한다. 여기서

5) 레비타스(Levitas)는 정치 노선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Levitas 1998). 첫째, 재분배 논의(redistributionist discourse)로 그것은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빈곤을 강조하고 복지의 확대를 통해 빈곤을 줄이려 한다. 그리고 배제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의 최소주의적 모델이 아니라 시민권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도덕적 언더클래스 논의(moral underclass discourse)로 그것은 언더클래스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주류에서 문화적으로 단절된 자로 간주하고 사회의 구조보다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복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의존을 강화하는 나쁜 것으로 여긴다. 셋째, 사회통합 논의(social integrationist discourse)로 사회적 배제/포용을 유급 노동에 대한 참여로 보고 유급 노동자간의 불평등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이는 복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각각은 구좌파, 신우파, 제3의 길에 조응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제3의 길은 노동시장의 참여 문제로만 사회적 배제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질서는 이해관계와 동기를 가진 자율적 개인간의 자발적 교환의 네트워크로 인식된다. 자유주의적 시민권 모델은 사회생활에서 권리와 책임의 계약적 교환과 영역의 분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배제는 사회영역의 부적합한 분리, 잘못된 규칙 적용, 영역간 자유이동과 교환의 장애로부터 발생한다. 경쟁과 자유주의적 국가의 개인의 권리 보호가 배제를 막는다.

독점(monopoly) 패러다임은 배제를 집단 독점의 형성 결과로 보는데 사회민주주의 또는 갈등이론에서 기원한다. 여기서 사회질서는 위계적 권력 관계를 통해 부과되는 강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배제는 계급, 지위, 정치권력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고 포용된 자들의 이해관계에 기여한다. 희소한 자원에 대한 독점은 사회적 폐쇄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영구화하고 배제된 자들은 외부자이면서 피지배자이다. 배제는 시민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유형구분은 ‘이데올로기’가 제도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 배제가 사회정책, 즉 복지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말하는 국가, 시장, 가족간의 복지 생산의 할당 방식인 복지체제(welfare regimes)의 세 가지 유형이 사회적 배제의 제도화를 분석하는데 훨씬 더 적합할 것이다. 그는 각국이 전후에 구축했던 복지체제가 적응전략들의 능력과 미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탈산업 경제로의 변형이 제도적 경로의존을 한다고 말하는데(Esping-Andersen 1999: 4) 이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배제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비록 사회적 배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시장의 복지 기능을 강조하는 체제로 영미권을 지칭한다. 그 주요 특징으로는 과세와 지출 그리고 공공부문

의 서비스 고용이 낮고, 반면 시장의 사적 서비스 분야가 발달되어 있고 많은 이전 프로그램이 소득과 연계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회보장이 협소하다는 의미에서 잔여적 모델이고 실버가 말한 전문화 패러다임과 같다. 둘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주로 유럽대륙의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적으로 분할된 높은 사회 보험(특히 연금)과 저발전된 사회 서비스, 공공 영역 고용으로 인한 여성 고용 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즉, 지위 분할(status segmentation)과 가족주의(familialism)의 혼합을 그 본질로 한다. 연대 패러다임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는 보편주의와 사적 복지의 최소화를 중시하는 체제로 북구 노르딕 국가들과 동일시된다. 그 기본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 서비스의 확장, 양성 평등이고 독점 패러다임과 상통한다.

그는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해 각 복지체제가 특유한 길을 걸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의 위기의 핵심이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의 작동이라는 점에서 복지체제의 특유한 길이란 사회적 배제의 제도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해 임금과 시장의 탈규제 전략과 복지국가 축소전략으로 제도화했지만 불평등과 빈곤의 강화로 귀결되었다. 보수주의적 복지 체제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기은퇴를 비롯한 노동공급의 축소로 제도화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대규모의 구조적 실업 때문에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리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체제는 사회적 배제에 대응해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했으나 공/사의 노동시장이 여성/남성의 분할로 나타났고 거대한 공공부문이 유발하는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인적 자본 투자전략으로 전환하였다 (Esping-Andersen 1996, 1999; Pierson 2001).

#### 4. 사회적 포용의 메카니즘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포용은 노/자 관계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도출된다.

맑스는 전체 노동시간을 사회적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즉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으로 양분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늘어나면 자본가의 이윤이 줄어들고 자본가의 이윤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 모델로 노/자 관계를 설정한다. 물론 여기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는 노동자의 노동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따라서 도덕적으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해 특별잉여가치가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것이 된다면 노/자 관계는 제로섬 게임 모델에 따른 적대적 관계이기를 그치고 특별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변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노/자 간의 적대적 모순은 비적대적 모순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전체 노동시간에서 생산된 가치가 임금과 이윤으로 이루어졌다면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이에 초과이윤이 덧붙여진다. 이는 노동시간의 척도인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화되어 크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진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노동자의 생활향상이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필요가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노/자간의 파트너십이 과거의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불

확실성이 항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든스가 상층 배제와 하층 배제를 구분한 결정적 원인을 덧붙여야겠다. 즉, 하층 배제와 상층 배제는 상호강화한다. 하층 배제는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을 퇴락시키고 이는 중간계급으로 상층 배제를 확대시키며 역으로 이러한 상층 배제는 하층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저하시켜 하층 배제를 심화한다(Giddens 1998). 즉 하층 배제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결여는 상층 배제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노동 착취의 불능과 동전의 양면관계를 형성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착취받지 못하는 하층 배제와 착취하지 못하는 상층 배제는 기묘한 공생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배제와 포용은 분화될 수 없는 단일체가 아닐 뿐더러 그 경계도 뛰어넘을 수 없는 철벽이 아니다. 개인의 능동성과 국가의 제도에 의존하여 다원화되고 유연화로 표현되는 거대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배제와 포용은 불안전(insecurity)하게 경험되고 여기에 만인의 평생 학습 또는 2차 기회(second chances)의 정치(Giddens 2003)에 대한 적극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층과 하층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상층 배제와 하층 배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윈윈 정치(win-win politics)로서의 일국민 정치인 제3의 길의 ‘포용의 정치’(Siegel & Marshall 2000)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하층 배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좌파의 ‘평등의 정치’와 상층 배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우파의 ‘배제의 정치’는 서로를 적으로 상징하는 이국민 정치로 배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뿐이다.

사회적 포용이 가능한 두 번째 근거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인적 자본은 사람의 몸과 머리에 체현된 지식과 기능으로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토대가 된다. 인적 자본은 과거의 수공업적 숙련과 달리 고도로 과학화된 숙련이고 교사와 본인의 노동이 투하되는 교육과정에 의한 죽은 노동의 축적일 뿐만 아니라 생활과정 자체에서 생산되고 축적되는 자본이다. 따라서 단순히 죽은 노동은 아니지만 인적 자본은 가치를 새로이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산 노동으로서의 노동력과 다르다.<sup>6)</sup>

인적 자본이 물적 자본과 다른 근본적 차이는 노동자와 분리가능한 물적 자본과 달리 인적 자본은 그 체현성 때문에 노동자와 분리불가능하다는 것이다(양신규·류동민 2000). 따라서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는 자본가가 물적 자본을 노동자와 분리하여 자신의 소유권 하에 집중, 이를 매개로 노동자를 지배, 착취할 수 있었던 반면,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 자본은 노동자와 분리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는 신분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인적 자본은 전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소유로 귀착된다. 다시 말하면 인적 자본은 원리적으로 수탈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 기초한 노동만을 착취할 수 있고 그 착취도 지배의 성격을 탈각한 지도적 의미의 형용모순적인 긍정적, 적극적 착취이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의 생산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창의성이므로 위계적이고 강압적인 기존의 지배로서의 착취조직에서 그것의 온전한 생산력을 최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인적 자본의 소유 여부가 배제와 포용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맑스처럼 숙련 노동을 비숙련 노동의 제공으로 단순하게 치환하는 것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는 마치 맑스가 길드 수공업자의 비전하는 숙련기술 자체가 그들의 자본이라고 말한 상황과 유사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과 자연간의 물질대사'로서의 맑스의 노동개념은 물질적 생산을 강조하는 근력(자원)기반경제의 테두리에 갇힌 것으로 오늘날 지식기반경제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간의 의미대사, 즉 '사회적 의미대사'로서의 정신적 생산이고(황태연 2002) 이런 의미에서 인적 자본을 단순히 숙련노동으로만 치환할 수도 없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이 사회적 지원을 위해 동원하는 신뢰 네트워크(trust network)로서 이때의 신뢰는 탈전통화 시대에 행위자들이 능동적으로 축적하고 동원하는 능동적 신뢰이고 그것에 특징적인 것은 성찰성, 자율성, 대화이다(Giddens 2000). 즉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은 조직인간보다 창의적 인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주요 조직원리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파트너십, 협력적 벤처가 된다.

기든스는 오늘날 세계화와 일상생활의 변형이 결합된 과정의 결과로서 민주화 과정이 작동하는 네 가지 사회적 맥락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적 생활 영역의 정서의 민주화, 시민사회 영역의 사회운동과 자조집단의 발전, 세계적 수준의 민주화와 함께 관료적 위계질서를 보다 유연하고 탈중심화된 권위체계로 대체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Giddens, Beck & Lash 1994). 이러한 제도적 성찰성은 사회적 자본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자원(근력)기반경제에서처럼 개인적 생산력은 왜소화되고 사회적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개인적 생산력을 체화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고 사회적 생산력을 소유한 자본가가 위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생산력과 사회적 생산력이 상생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탈속련화가 아니라 신속련화가 지배적 경향이 된다. 따라서 노/자관계는 지배관계가 아니라 지도관계로, 착취(exploitation)는 ‘뽑아낸다’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개발한다’는 긍정적 의미로 변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가 열린다. 지배를 통한 착취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지배와 착취간의 모순이 첨예화되고 지배착취라는 부정적 의미의 착취가 아니라 지도착취라는 형용모순적인 긍정적 의미의 착취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물질적 자원에 의존하여 환경위기를 심화시키는 장치산업 또는 굴뚝산업의 자원기반경제와 달리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간의 화해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근력에 의존하여 초기 자본주의의 경공업에서의 여성해방적 힘을 억압하는 중공업의 근력기반경제와 달리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여 여성해방을 실현할 경제적 근거가 존재한다(황태연 1989, 1996; Giddens 2000). 그리고 경제의 지식의존성은 노인의 생산과정에서의 참여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자원(근력)기반경제의 고정된 은퇴연령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김호균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식기반경제를 통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자연친화성 및 사회친화성과 양립하는 자율성지향이 강화되는 사회로 기술하고 있다(김호균 2001: 159).

## 5. 결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와 포용에 핵심적이라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이원론처럼 보인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를 일괄 악마시하는 종말론적 비판(판)론과 그 ‘멋진 신세계’에 환호만 하는 미래학이 창궐하고, 이는 지식기반경제의 구조만을 탓하면서 행위자는 무죄라고 하는 구좌파와 행위자가 문제이지 구조는 결백하다는 신우파의 논리적 기초를 이룬다. 그러나 현실은 이 두 경향이 상호침투가능하고 상호중첩되는 불안정한 회색지대이며 사회적 배제와 포용은 순전히 경험적 문제이다. 구좌파와 신우파의 원리주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어느 한편만을 설교하는 반편의 ‘복음’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메카니즘은 지식기반경제의 거시적인 객관적 경향과 미시적인 개인의 능동성을 매개하는 제도적 경로의존에 따라 다양한 복지체제로 제도화되어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모순적 필연성은 능동적 개인의 가능성에 기반하여 제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여전히 제도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포용의 경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구좌파의 몰락과 신우파의 득세는 지식기반경제의 배제의 메카니즘의 작동에 의한 전후 사회복지국가 합의의 해체와 직결된 것이다. 복지국가는 삼중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 요체는 기능적으로는 복지의 존, 조직적으로는 관료제, 재정적으로는 만성적인 재정위기였다. 오늘날 제3의 길과 함께 복지의 재구성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전후합의(post war consensus)의 해체에 이은 제3의 길로의 ‘탈냉전 합의(post Cold War consensus)’를 의미한다(Baer 2000: 274). 기능적으로는 소극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적극적, 사전적 복지로서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강조하는 ‘임파워먼트’(최선미 2000), 조직적으로는 다원적 복지를 추구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Giddens 2002), 재정적으로는 생산적 복지로서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사회발전론(social development)’(Giddens 2001: 157-171)이 그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역동적 조사에 기초한 최신의 경험연구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네 가지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기한다(Leisering & Leibfried 2001: 257-278). 첫째, 생애주기정책(lifecourse policy)으로의 반

빈곤 정책의 재개념화, 둘째, 빈자의 행위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개발적 접근(enabling approach), 셋째, 패자를 위한 정책과 승자를 위한 정책간의 통합적 사회정책(integrated social policy), 넷째, 복지정책 자체의 효과를 평가하는 성찰적 사회정책(reflexive social policy)이다.

#### 참고문헌

- 김영란. 2001.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배제에서 포용으로”, 『사회복지정책』 제13집.
- 김호균. 2001.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 백의.
- 박병현·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5권.
- 심창학. 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 앤소니 기든스. 김현옥 역. 1997.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한울.
- 양신규·류동민. 2000. “신경제와 벤처현상의 이해”, 『경제와 사회』 제47호.
- 울리히 벡. 홍성태 역. 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 \_\_\_\_\_. 홍윤기 역. 1999.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 최선미. 2000. “장기실업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임파워먼트 모델 개발”,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피터 드러커 외. 기술과 진화의 경제학 역. 1999. 『지식자본주의 혁명: 지식경제의 도래와 사회변화』, 21세기북스.
- 황태연. 1989. 『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 중원문화.
- \_\_\_\_\_. 1994.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 나남출판.
- \_\_\_\_\_. 1996. 『지배와 이성 - 정치경제, 자연환경, 진보사상의 재구성』, 창작과비평사.
- \_\_\_\_\_. 1999.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와 제국주의의 종식”, 『계간 사상』 겨울호.
- \_\_\_\_\_. 2002. “맑스의 혁명사상”, 『사상』 봄호.

- Agulnik, P. et al. 2002.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versity Press.
- Apospori, E & J. Millar. (eds). 2003. *The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in Europe*, Edward Elgar.
- Atkinson, R. D. & Court, R. H. 1998, "The New Economy Index: Understanding America's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essive Policy Institute.
- Baer, K. S. 2000. *Reinventing Democrat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Barnes, M. et al. 2002.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Edward Elgar.
- Beck, U. 1998. *Democracy without Enemies*, Polity.
- \_\_\_\_\_. & E. Beck-Gernsheim.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 Brown, P. & Crompton, R. (eds). 1993. *Economic Restructuring and Social Exclusion*. UCL Press.
- Castells, M. 1996. *The Information Age, Volume I,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ers.
- Esping-Andersen, G. (ed). 1993. *Changing Classes: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Post-industrial societies*. Sage.
- \_\_\_\_\_. (ed).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Sage.
- \_\_\_\_\_.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uncil. 2000. *Presidency Conclusions*.
- Giddens, A.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Polity.
- \_\_\_\_\_. 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Polity.
- \_\_\_\_\_. (ed) 2001.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
- \_\_\_\_\_. 2002. *Where now for New Labour?* Polity.
- \_\_\_\_\_. et al. 2003. *Progressive Futures: New Ideas for the Centre-Left*. Policy Network.
- \_\_\_\_\_. U. Beck & S. Lash. 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olity.
- Greenberg, S. B. et al. (ed). 1997. *The New Majority*. Yale University Press.
- Heisler, B. S. 1994.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Underclass: Questions of Urban Poverty, Race and Citizenship." in Turner, B & D. P. Moynihan. eds. *Citizenship: Critical Concepts*.
- Jessop, B. et al. 1988. *Thatcherism: A Tale of Two Nation*. Polity.
- Leisering, L & S. Leibfried, 1999. *Time and Poverty in Western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tas, R. 1998.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Macmillan Press.

Littlewood, P. et al. 1999. *Social Exclusion in Europe: Problems and Paradigms*. Ashgate.

Mayers, D. G, Bergman, J. & Salais, R. (eds). 2001.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ward Elgar.

Neef, D. et al. (ed). 1998. *The Economic Impact of Knowledge*. Butterworth-Heinemann.

OECD. 1996. *The Knowledge-Based Economy*.

Pierson, J. 2002.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Pierson, P. 2001.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Siegel, F. & Marshall, W. 2000. "The Quality of Life Agenda." Blueprint 9/1.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 i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3

Steinert, H & Pilgram, A. (eds). 2003. *Welfare Policy from Below: Struggles Against Social Exclusion in European*. Ashgate.

